

한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

정영애*, 전진호**

선문대학교 IT교육학부*,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Young-Ae Jung*, Jin-Ho Jeon**

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Sun-Moon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wan-Dong University**

요약 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 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 셋째, 다문화 규칙의 수립으로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 정책, 한국, 일본, 다양성

Abstract The adven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racial nation is a new change of the times and a new phenomenon. In this social change, a need for a new theory and a new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s surfacing. In case of Japan,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by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An investigation on the changing process of policy in Japan has a great significance, we think.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ason of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changes of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deduced implications and presented a new theory for multi-cultural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irstly, acceptance of diversity and mutual recognition, secondly,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through social consultation and thirdly,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regulations followed by reestablishment of economical and political regulations should be required.

Key Words : multi-cultural, Policy, Korea, Japan, Diversity

1. 서론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

이다. 매해 수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들을 이방인으로 취급 하

Received 28 August 2013, Revised 26 Septem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Jin-Ho Jeon(Kwan-Dong University)

Email: jhgy@kd.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다.[1] 국내 총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들이 취업과 결혼을 통해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2] 2010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9만5천명으로 10년 사이에 2.5배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이주민과 그 자녀가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¹⁾처럼 외국으로부터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전에 이르면 토박이 주민과 갈등이 본격화 된다고 한다. 이렇듯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이미 139만 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10년 전에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정책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이론을 고찰해 보고 한일 양국 간 다문화 정책의 추진이유, 법·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다문화 시대의 출현 및 이론

세계화 및 글로벌화로 진화되어온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국가 모델은 새로운 인종차별과 갈등에 직면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 등 세 가지이며 이는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분석의 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1 차별적 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이 모형은 유입국 입장에서 이민자를 3D(직종과 같이 특정한 노동시장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복지수혜를 비롯하여, 국적이나 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은 제한하는 모형이다. 독일·일본·한국 등 단일 민족사회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미국·캐나다 등 동화 모형이나 다문화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생산가능직 노동자 등 특정 유형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주 가능성을 차단한다. 국적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결국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배제 수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 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우수 전문 기술인력 이주자'를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선별적 이민정책'을 취하려는 경향은 대부분의 나라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차별적 배제모형은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인정과 수용보다는 다문화 이주자들을 추방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주류 문화의 기득권보전과 함께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2.2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

동화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모형이다. 동화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자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치르는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하는 정책이다. 이때 다수에 의해 정의된 문화적 행태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민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들은 국민 공동체에 대하여 완전한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모형의 국가는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 자녀의 정규 학교 취학을 지원함으로써 동화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민자의 언어·생활습관을 금지하거나 유지하도록 지원하지는 않지만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 금지 등 정책적으로 이민자가 쉽게 동화하도록 지원 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표방했던 '용광로 모형', 프랑스 사회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공화주의 모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별적

1)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는 프랑스와 인접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연쇄적인 차량 방화사건 및 이민자 청소년들과 경찰 사이의 충돌이다.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프랑스의 교외 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했으며, 자동차나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경찰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었다.

배제모형과는 달리 국적과 시민권을 쉽게 부여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자기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주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귀화절차도 간단하다. ‘동화’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며 국가는 소수인종에게 고유문화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들이 주류 문화에 수월하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며 외국인 정책 초기에는 대부분 동화를 우선적으로 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동화모형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이주자를 수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조건은 기존의 주류 문화에 융합되고 동화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다문화 이주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않는다. 단지 주류 문화만이 인정되고 다문화 이주자를 위한 특별한 대우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적 현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거부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 다문화주의 모형 (multi-cultural model)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둔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 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관습들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타문화·타언어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 정책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에서는 다민족·다문화 통합에 있어 동화주의가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며 소수집단의 문화적·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여 소수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을 버리거나 완전한 참여를 제한 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에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Table 1〉 multi-cultural policy mode[4]

| |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 assimilationist Model | multicultural model |
|----------------------|---|--|--|
| policy direction | state and society the lord of the possibility of unwanted immigrants and locals just want to maintain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that | people assume that the early assimilation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that want to | minorities for equal value, acknowledge and support the preservation and preferential measures such as affirmative action that |
| policy objective | racial minorities and minimize the removal of | mainstream assimilation of minorities | recognize diversit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 |
| National role | actively regulated | limited support | actively support |
| Perspective migrants | nations, threatening the existence | fully recognized as a fairy tale premise | mutual respect and tolerance |
| concept of equality | emphasize the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 social security and equality of opportunity | affirmative action |
| Legal means | enforcement and deportation | institutionalization of non-discrimination | allow various rights |
| granted nationality | note layman, strict conditions | territoriality, easier conditions | territoriality, allow dual citizenship |
| identity | heterogeneity | homogeneity | heterogeneity |
| country case | germany, japan | france, the united kingdom | canada, australia |

3. 한일 다문화 정책 비교

한국은 2000년대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주민정책, 다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 개정된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 시행 이후에 사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 다문화적 정체성이란 강제나 배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자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성을 뜻한다.

<Table 2> The main content and features of multicultural policy one day compared

| | Korea | Japan |
|--------------------------------------|---|--|
| policy perspective, the dominant | jus sanguinis a fairy tale based on discrimination, exclusil on perspective | |
| basic direction multicultural policy |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 women realize and open multicultural society | the realiza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assimilation→Integrated) |
| demographic factors | Surge in immigrants (Simple workers, immigrants) | amendment of the admission by the Japanese immigrants increased |
| social factors | immigrant wome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roblems | Japanese migrants to settle problems in the municipality |
| political factors |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duced influx of foreign workers better | low birth rate, aging measures Induced influx of foreign workers better |
| economic factors | globalization , 3D aversion , changes in industry in the form of | globalization, 3D aversion, changes in industry in the form of |
| multicultural law system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limit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 multicultural promotion plan, Immigration law → legal resident registration act provide urgent |
| policy Implementati on System | foreign policy committee,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council | promotion office established foreign policy |
| multicultural policies by subject | government leadership | than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center hall municipal civil society movements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
| implications | by a variety of administrative law, foreign policy | foreign policy at the local level, promote harmony with foreigners |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한일양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변화 과정 및 정책의 추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첫째, 외국인의 국내거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 거주를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1963년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 입국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공무원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한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나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상시 휴대의 의무가 생긴다. 일본도 2008년까지는 일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던 ‘주민대장법’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주민대장법’에 편입된 이유는 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관리되어 그들이 무슨 형태로 거주하는지를 알 수 없었고 그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둘째, 한일 양국의 다문화정책의 추진배경을 보면 한국정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족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리중심의 외국인정책에서 다문화주의 이념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는 한국 사회가 처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제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정주화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야만 했다. 한국의 미래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다. 급속하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정책은 장래의 사회존립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산업노동인구의 인적자원이 될 뿐 아니라 국제 사회를 향한 우수한 인재로 한국사회에서 활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문화공생축진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5]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 인권 보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 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타 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개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정책적 의도보다는 자의적 행동에 의한 결과의 측면이 강하다.

셋째,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각 국가에서 이주외국인이 유입된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은 크게 결혼을 통한 이민과 경제적 소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로 구분되는데 부족한 신부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저출산이나 기피업종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현실적 수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결혼이민의 경우 동화모형이, 노동자의 경우 차별적 배제모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넷째, 한일양국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폐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선진국 출신의 고급인력 및 외국계 동포와 동남아 등의 개발 도상국 출신 단순 노동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주로 출입국관리나 고용관련 법적 및 기구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고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외국인이 구체적인 일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언어, 교육, 의료 등 각종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선도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2009년부터 중앙정부 외국인 정책의 사회통합서비스 전달기관을 지자체로 이양했다.

여섯째, 정책 대상자의 경우 한국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대상은 ‘결혼이주자’ ‘제한외국인’ 등에 국한하는데 반해 일본은 ‘다문화공생’³⁾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정책대상과는 달리 일본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아직 정책의 중심이 가족에 국한되

어 있어 오히려 가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가 있고 다문화와 오히려 상반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고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

한국은 앞장에서 살펴본 다문화 국가에 대한 주요이론들이나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차별적 배제모형과 동화모형이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 받으면서 등장한 다문화주의 모형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도 어느 나라의 정책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존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좀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의 일환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이 가능해야 한다. 다양성수용과 상호인정은 개인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를 존중해 줘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바탕으로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이 가능해야 한다.[7]

둘째,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받아들여 상향식 정책⁴⁾을 병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지원정책’, ‘생활지원정책’, ‘다문화 공생사회 만들기’ 등 3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정책 들은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했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적인 부분은 지자체의 지역 주민들의 몫이었다.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고 지역 주민들 또한 그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보다 다채로운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직접 정책을 제시하고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탄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

3) 다문화공생이란 일본에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4)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정책결정 과정 등에서 하급 구성원 또는 하급 부서의 이니셔티브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참여적 관리’의 접근 방식을 말한다.

켜 생각해 보면 국가정책 중 하향식 정책으로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국민발의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향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나 벌어졌던 외국인 혐오증이 인터넷 등에서 활동하던 세력들이 공식적인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다문화 정서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 외국인 집단행동이 촉발되거나, 외국인 대상 혐오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보듬어주지 못한 채 범죄자나 사회부적응자로 내몰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다문화 이해 증진과 문화의 다양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 또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증가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여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5. 결론

한국은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음을 체감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새로이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정 등 다수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일반 국민들 간의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수용과 상호인정이다. 즉, 기존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와의 문화적 차이, 외모적 차이, 언어적 차이 등을 인정하고 편견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자세로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국민

적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둘째, 일본식 상향식 정책의 병행 실천이다. 국민발의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향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다. 기존 한국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는 개인과 집단 간에 존재해 왔고 이들 간의 마찰과 갈등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완전한 국민적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외국인 혐오증, 외국인 범죄 등으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반다문화 증상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이론을 바탕으로 실천적 대안과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K. Kwon, "Multicultural country in the preferred direction of social inclusion policies", Korea Immigration Service. 2008.
- [2] Y. K. Kim, "Multicultural Aspect of Family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POLICYFORUM, No. 175, pp.45-62. 2011.
- [3] H. E. Kim, "Korea's cultural socialization and social support for members of multicultural", Multicultural Social Policy Research Conference, 2010.
- [4] J. K. Park, "Korea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olic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pp.171-195, 2010.
- [5] I. S. Jung, "Japan's Multicultural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Vol. 2011-No. 13, pp.1-10, 2011.
- [6] J. H. Jee, M. J. Jung and D. K. Kim, "The Phenomena of Multicultural Nation and New Policy Model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3 No. 2, p.109-136, 2009.
- [7] J. M. Hwang, E. S. Kim, H. Choi and D. J. Lee, "Korea's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oriented research 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정 영 애(Jung, Young-Ae)



- 1991년 3월 ~ 1995년 2월 : 호서대학교 컴퓨터과학 이학사
- 1998년 3월 ~ 2000년 2월 : 호서대학교 컴퓨터과학 이학석사
- 2000년 3월 ~ 2007년 2월 :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 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IT교육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다문화, 정보 리터러시
· E-Mail : mariachoi911@gmail.com

전 진 호(Jeon, Jin Ho)



- 1990년 3월~1994년 2월 :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6년 3월~1998년 8월 :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 2000년 3월~2007년 2월 :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 이학박사
- 2009년 9월~현재 :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능형시스템, 금융공학, 정보리터러시
· E-Mail : jhgy@kd.ac.kr